

지방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충남 지역 소멸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 시 : 2022년 4월 14일 (목) 14:00

장 소 : 충남연구원 대회의실

주최/주관 :  대전충남취재본부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후 원 :  충청남도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목 차

발표 주제1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	1
1. 지방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3
2. 지방 인구감소 대응 현실과 과제	16
3.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25
발표 주제2 인구감소 대응 대책 추진방안	42
1. 지역 인구감소 현황	44
2. 그간 정책의 한계	48
3.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50
4. 주요 추진방안	53

2022.4.14(목) 충남연구원+뉴스1 대전충남취재본부
충남 지역 소멸위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 전략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1. 지방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2. 지방 인구감소 대응 현실과 과제
3.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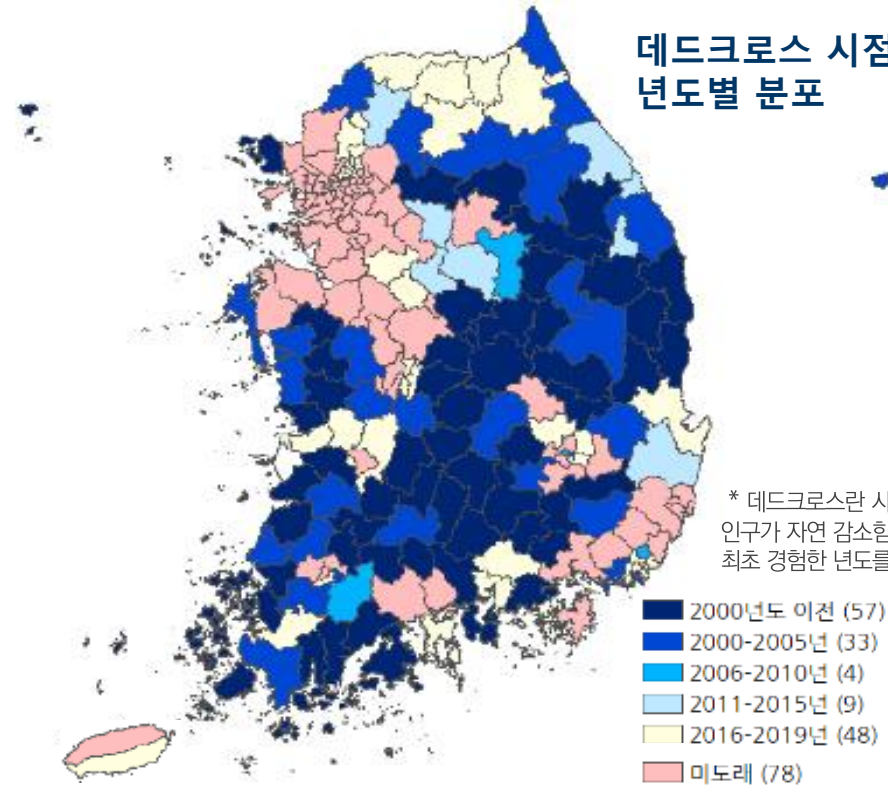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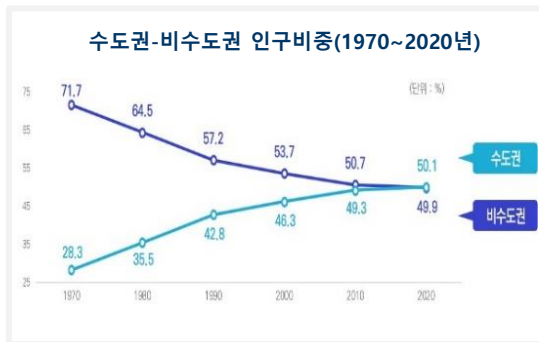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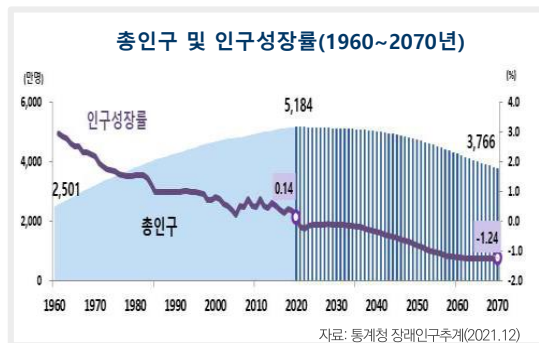
지방 인구감소 실태와 전망



1. 2020년 대한민국,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 직면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

시·군·구의 ¼은 2000년 이전 진행, 사망자수가 출생아수 보다 많아 (최대 6.9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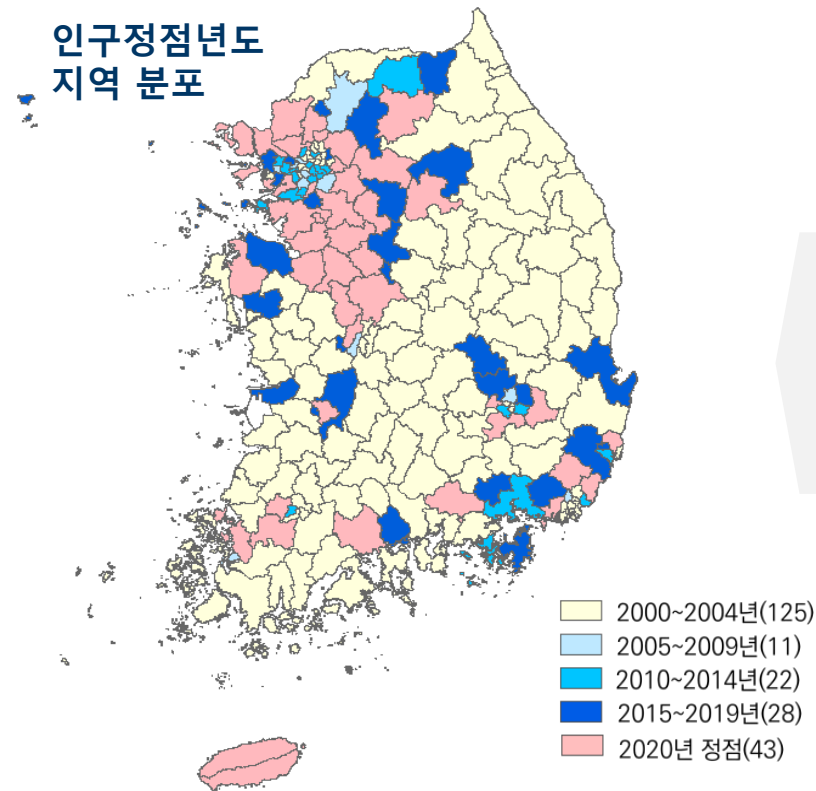
2.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와 자립기반 저하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감소한 시·군·구는 60곳(38%)

시·군·구의 118곳(52%)이 2020년에 인구저점...앞으로 계속 인구저점 경신 전망

인구정점년도와 인구저점년도 분포

연도	인구정점연도	인구저점연도
2000~2004년	125개(54%)	67개(29%)
2005~2009년	11개(5%)	20개(9%)
2010~2014년	22개(10%)	5개(2%)
2015~2019년	28개(12%)	19개(8%)
2020년	43개(19%)	118개(52%)
총계	229개(100%)	229개(100%)



인구정점대비 절반이상 감축 중소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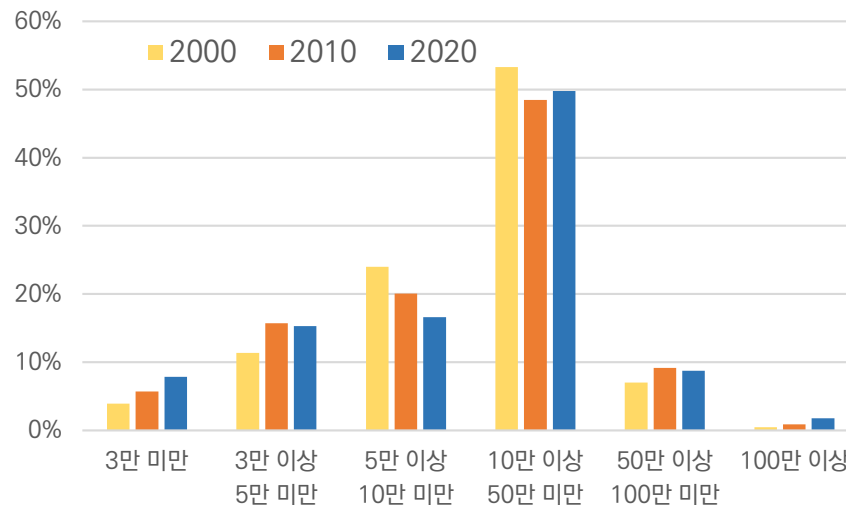
구분	인구정점 대비 감축 비율 (1975~2020년)
태백시	-65.1%
김제시	-63.5%
상주시	-57.8%
정읍시	-57.1%
문경시	-55.8%
남원시	-54.7%

3. 인구의 지역적 편재와 양극화 심화

지자체 인구규모별 양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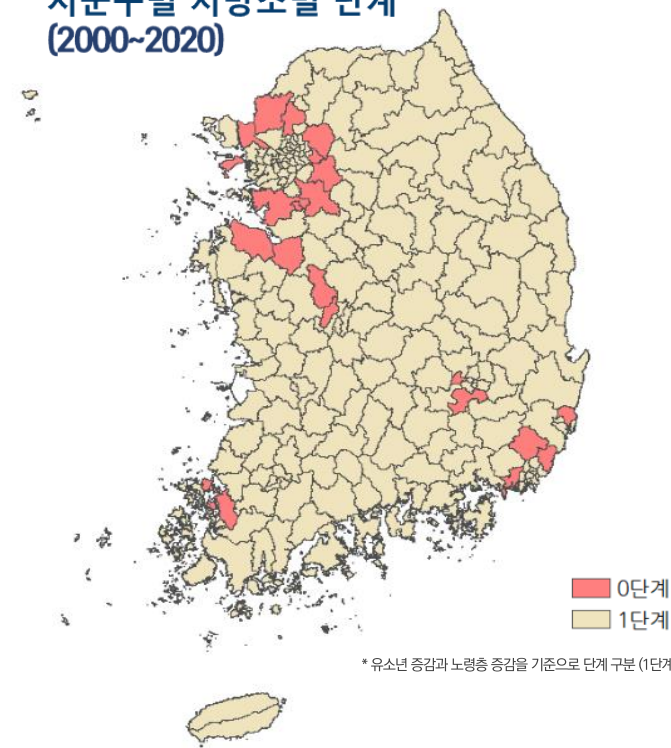
인구 3만명 미만 시·군·구는 3배(6개→18개) 증가, 100만명 이상 시·군·구는 4배(1개→4개) 증가

인구규모별 지자체수 변화(2000~2020)



- ✓ 2000~2020년 기간동안 순증가 인구(443만명)은 50만명 이상 시·군·구와 3만 미만 시·군·구에서 증가한 반면, 3만이상~50만미만 시·군·구에서 감소

시군구별 지방소멸 단계 (200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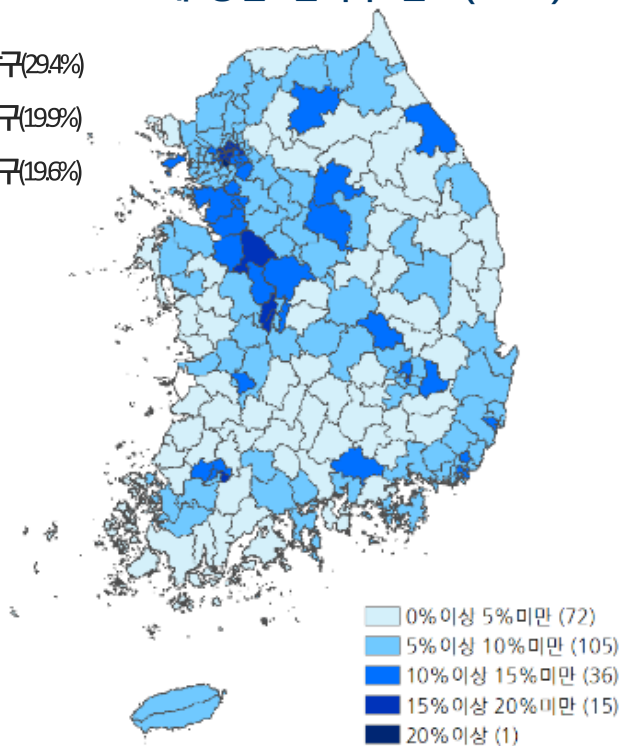
청년1인가구와 고령1인가구 분포

청년1인 가구는 서울시와 대도시에 집중

고령1인가구는 인구감소 지역에 집중하여 청년과 상반된 분포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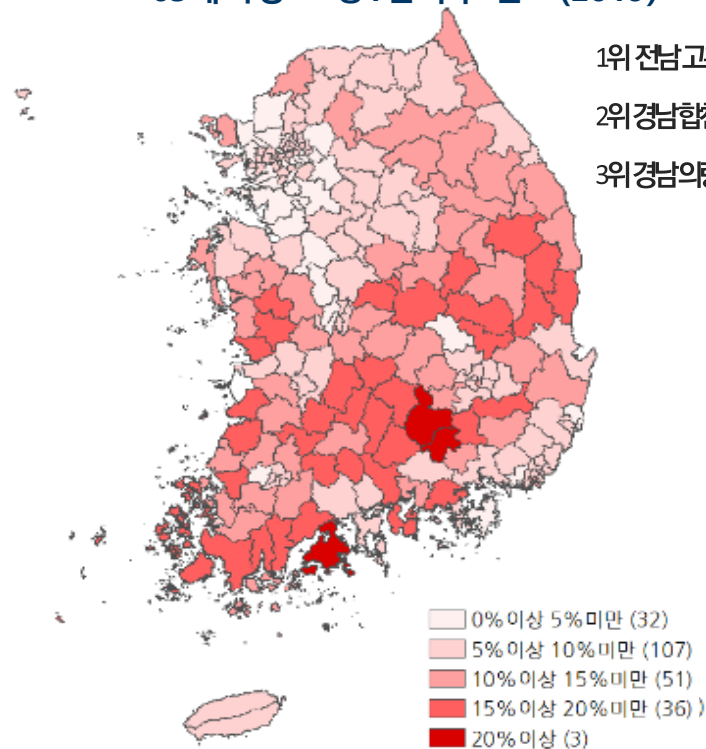
20~30대 청년1인가구 분포(2019)

- 1위 서울시 관악구(29.4%)
- 2위 서울시 광진구(19.9%)
- 3위 서울시 마포구(19.6%)



65세 이상 고령1인가구 분포(2019)

- 1위 전남 고흥군(20.8%)
- 2위 경남 합천군(20.7%)
- 3위 경남 의령군(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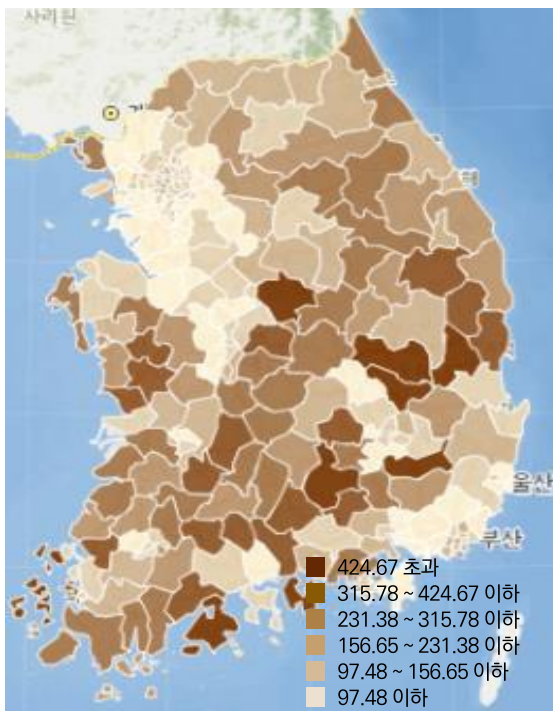


인구감소와 지역 격차의 악순환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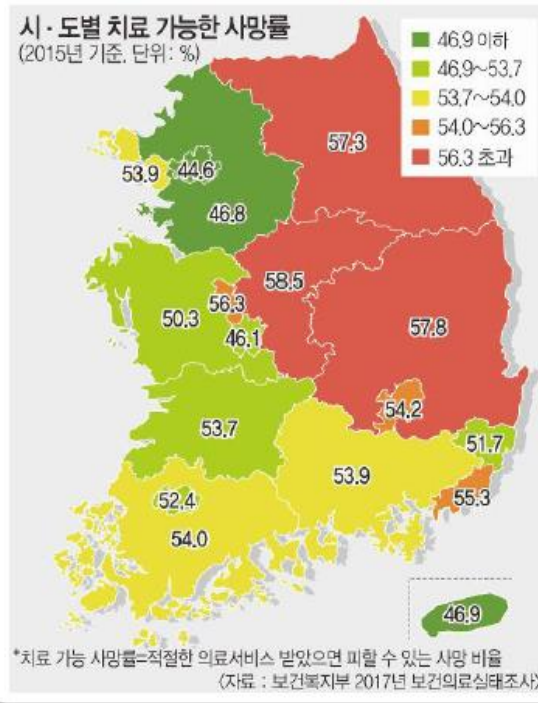
치료가능 사망률이 강남구(10만명당 26.9명)와 경북 영양군(107.8명) 간 3.64배 차이

노령화지수(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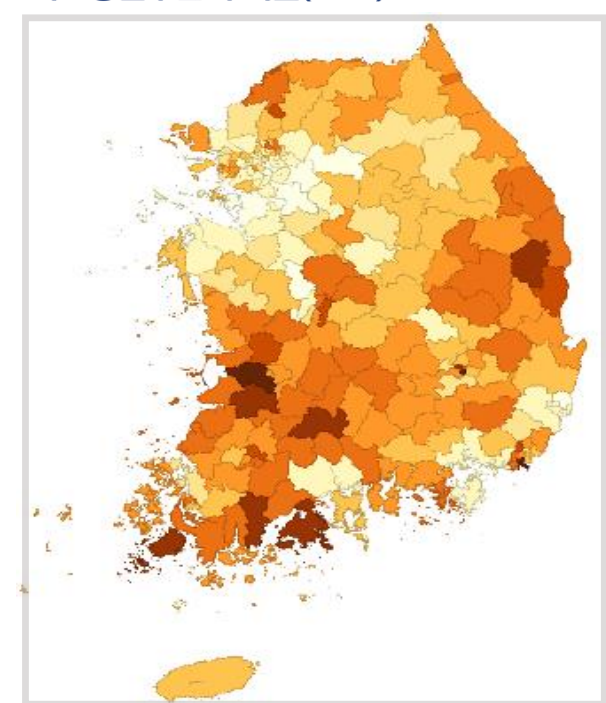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치료가능 사망률(2015)



자료: 보건복지부(2018)

기초생활수급자 비율(2015)



자료: 장인수(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지방 인구감소 요인과 인구담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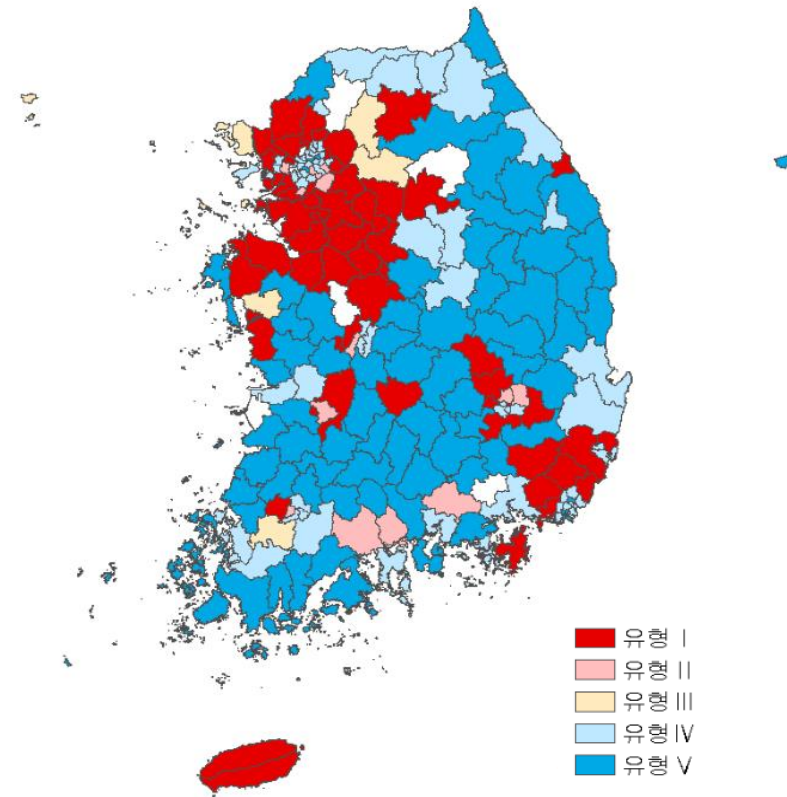
사회적 이동(유출)이 지방 인구감소의 공통 요인

평균 합계출산율(2019) : 군(1.25명) - 시(1.05명) - 구(0.82명); 최고 전남 영광군(2.583), 최저 서울 관악구(0.536)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지역 유형화

구분	자연증감	사회증감	유형	개수	행정체제별			인구 규모별				
					시	군	구	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50만 미만	50만 이상	
인구 증가 지역	+	+	I	53	36	8	9	2	4	34	13	
	+	-	II	13	7	-	6	-	-	9	4	
	-	+	III	7	1	6	-	1	3	3	-	
		소계		73	45	14	15	3	7	46	17	
인구 감소 지역	+	-	IV	72	18	6	48	5	8	51	8	
	-	-	V	78	14	60	4	43	23	12	-	
		소계		150	32	66	52	48	31	63	8	

※ 세종시 및 분류불가 지자체(5) 제외하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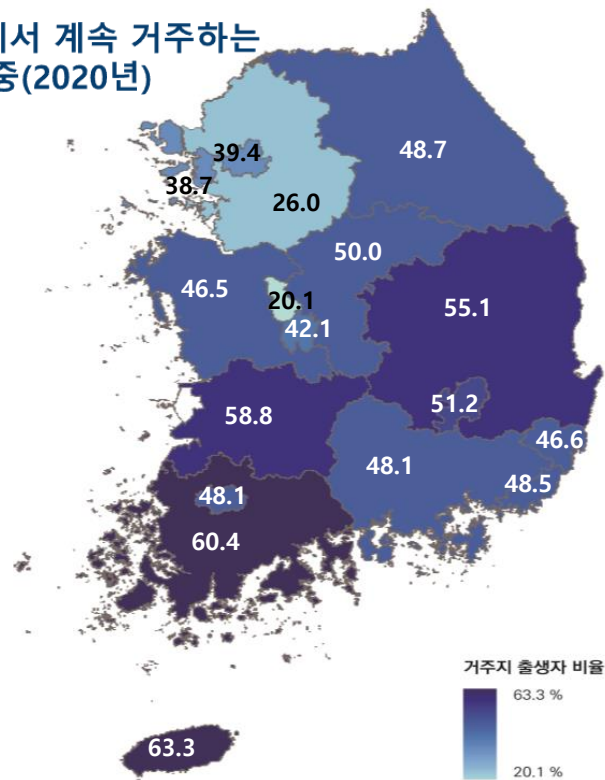


출생지에서 얼마나 계속 거주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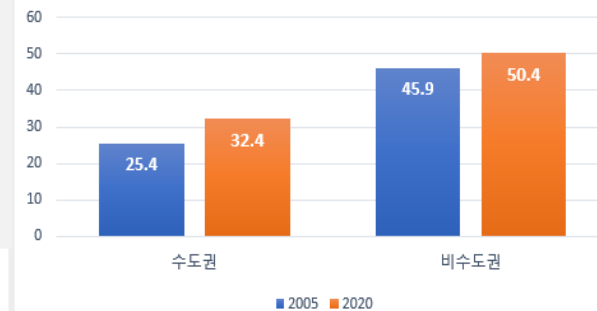
전체 인구의 41.4%가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 (2005년 36.4% → 2020년 41.4%)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 전남, 전북, 경북 순이나, 점차 감소 추세

출생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인구 비중(2020년)



출생지 계속 거주비율 변화(2005~2020)



5. 지방 인구의 연령별·목적별 이동 양상

군부에서 20~30대 유출, 50~60대는 군부로 유입

생애주기별로 상반된 지역간 인구이동 양상

최근 3년간 20~30대의 지역간 이동 방향·목적

구분		순이동률 평균(%)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수도권	서울	0.35	-0.92	1.64	0.70	-1.07
	시부	1.46	0.71	0.47	-0.14	0.42
	군부	-0.31	0.24	-0.05	0.20	-0.70
광역시*	시부	-1.38	-0.27	-0.81	0.06	-0.36
	군부	3.93	1.96	0.43	-0.30	1.84
도	시부	-1.75	-0.21	-1.33	-0.40	0.19
	군부	-4.65	-1.27	-2.26	-0.90	-0.22

주 1: 같은 지역 유형별 순이동률 평균을 산출 *인천광역시를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8~2020년) 재구성

최근 3년간 50~60대의 지역간 이동 방향·목적

구분		순이동률 평균(%)				
		전체	주택	직업	교육	기타
수도권	서울	-1.55	-0.95	-0.18	0.03	-0.45
	시부	0.82	0.59	0.01	-0.01	0.23
	군부	2.57	1.88	0.24	0.01	0.44
광역시*	시부	-0.86	-0.39	-0.19	0	-0.28
	군부	3.36	2.11	0.40	0	0.85
도	시부	0.51	0.21	0.22	0	0.08
	군부	1.43	0.40	0.52	-0.01	0.52

주 2: (순이동자수 ÷ 총인구수: +이면 사회적이동으로 인구 증가/-이면 사회적이동으로 인구 감소)

20~30대 청년인구의 이동 방향

교육, 직업 목적의 청년인구 유출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

강원도 청년은 수도권으로, 경북과 전남 청년은 수도권과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으로 이동

20~30대 교육 목적 이동 유출지



20~30대 직업 목적 이동 유출지



6. 장래 인구분포 전망과 과제

인구감소에도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은 지속 증가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입 전망, 수도권-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 심화 전망

수도권-비수도권 인구비중 변화 전망(1970~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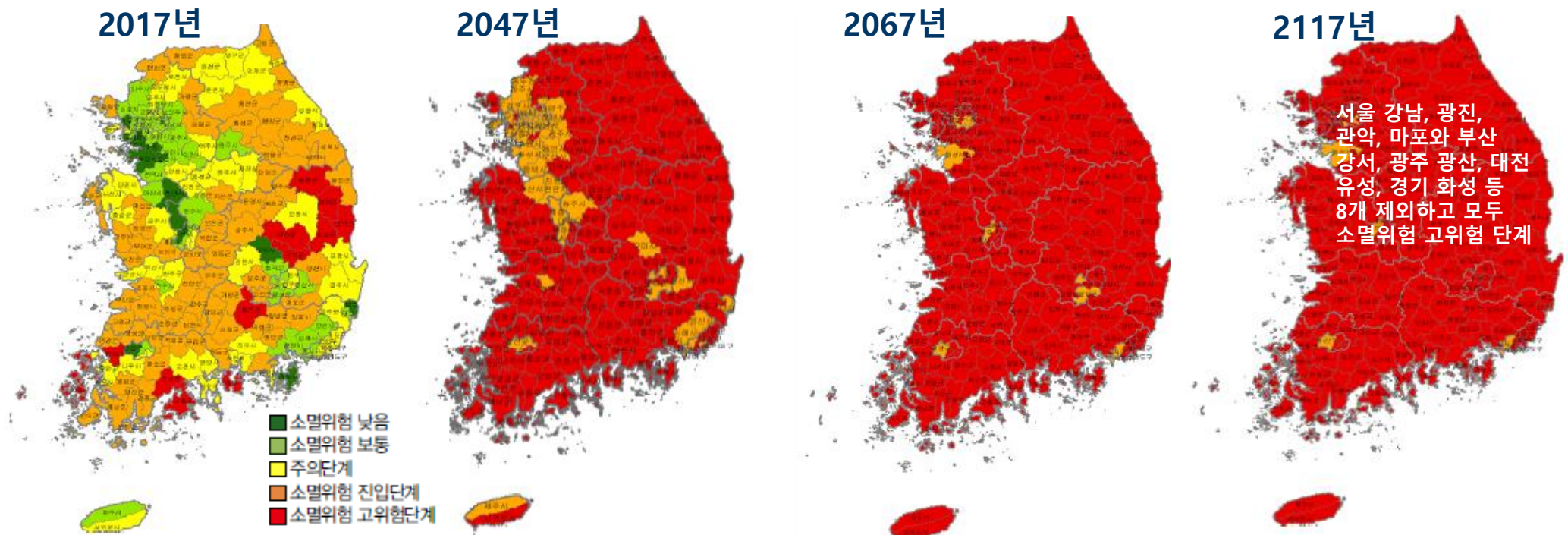


자료: 국토연구원(2020)

지방소멸 위험지역 전망(2017~2117년)

2047년 부터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단계 진입

소멸 고위험 지역: 12개('17년) - 157개(2047년) - 229개(2067년) - 221개(2117년)



주: 합계출산율(0.98명) 지속 가정.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토대로 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지수를 적용

자료: 감사원(2021)



지방 인구감소 대응 현실과 과제

1. 중앙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현황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둔 인구사회정책 추진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3개 목표,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
 - 목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
- * 1차계획(06~10): 출산·양육에 유리한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 * 2차 계획(11~15) :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 * 3차 계획(16~20) : OECD 국가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대응
- 제4차 계획(2021~2025)에서 지역 관점 포함
 - 삶의 여건의 공간적 균형 회복을 통해 인구분산과 세대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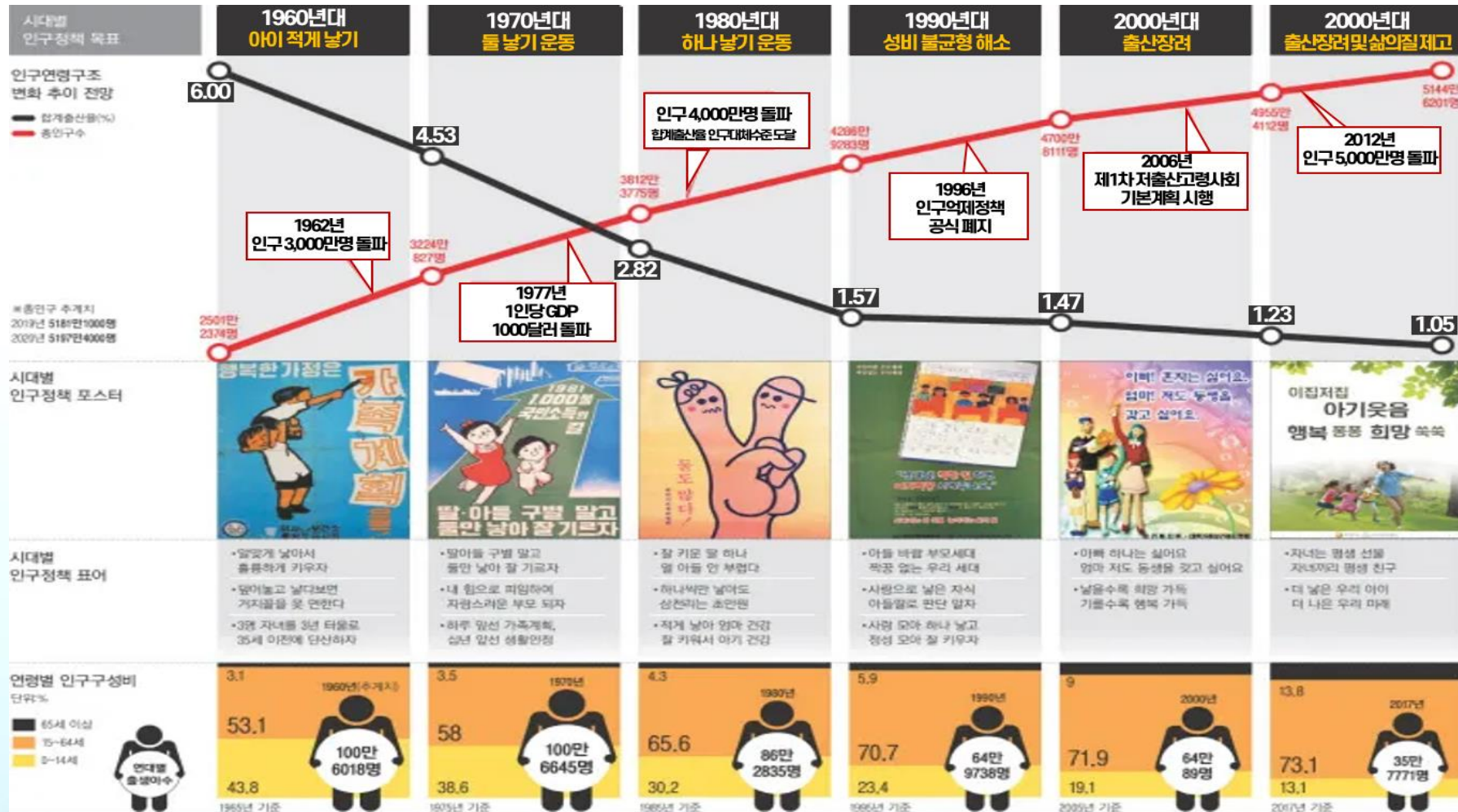
중앙정부 부처 및 지자체 지원시책

- 중앙정부 부처: “저출산 대응”
 - 임신·출산지원,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 2021년 저출산 예산의 61%가 청년층에 지원 (국회예산정책처, 2021)
- 지자체: “인구 늘리기”
 - 인구의 자연증가(출산력 제고)에 초점
 - 저출산·고령화대책 위주 공통사업 추진 (중앙정부 보조사업 84.1%)
 - 출산 장려*와 청년인구의 유입에 초점
- * 합계출산율 여부 상관없이 출산장려금 등 시책 추진

범부처 인구정책 TF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중앙부처 차원의 인구정책TF(2019년~계속) 구성,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추진
- 제2기 TF(2020) 부터 지역공동화, 지역소멸을 정책과제로 선정 대응
- 제3기 TF(2021)는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 선제 대응
- 제4기 TF(2022)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모색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9(정의) 개정 및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021.10) 등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발의 및 계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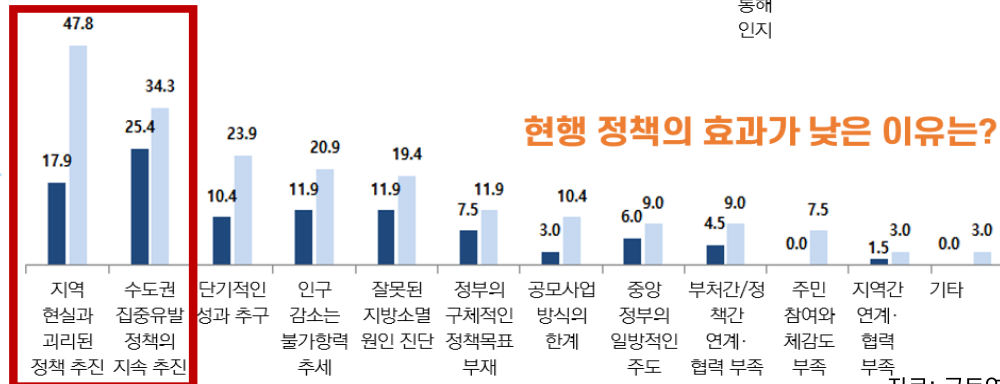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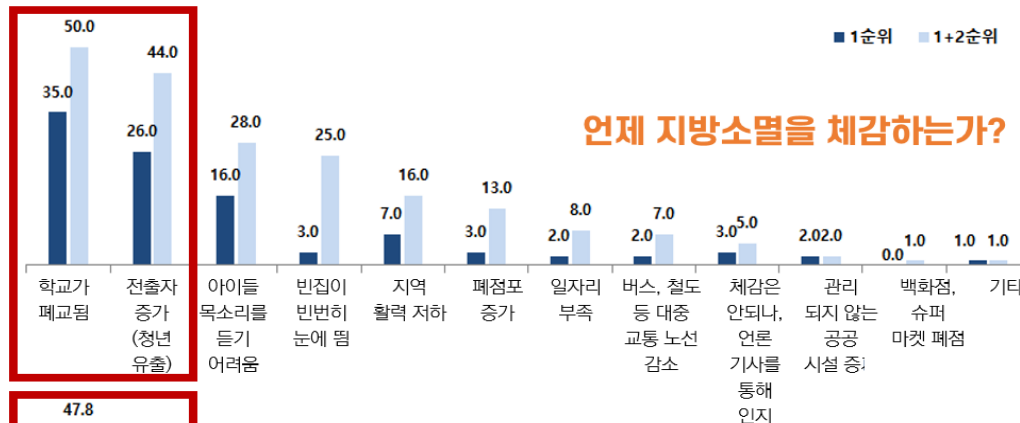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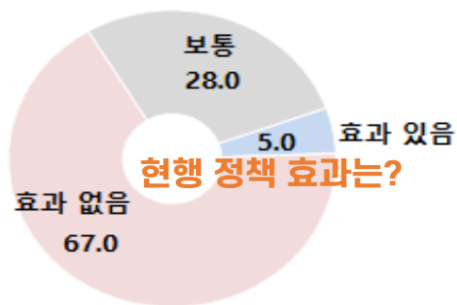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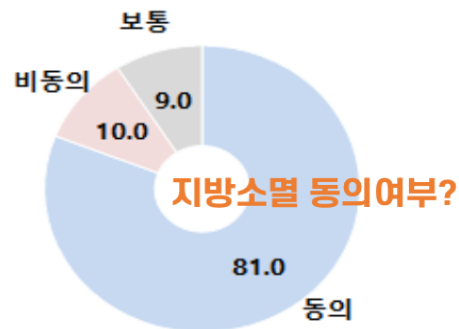
중앙정부의 인구정책 변화



자료 : 경향신문(2021.1.9)

전문가&정책실무자 의식 조사

- (조사대상) 중앙 및 지자체 정책실무자, 대학교수,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문가 (응답 100명)
- (조사기간) 2021.9월 (e-mail 활용), 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 수행



자료: 국토연구원(2021)

2. 최근 동향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1.10)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고시(2022.2.9)

▶ 인구감소지역(균특법 제2조9호와 시행령 제2조의3)

- 인구감소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추이 및 재정여건 등 고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균특법 제16조의2와 시행령 제16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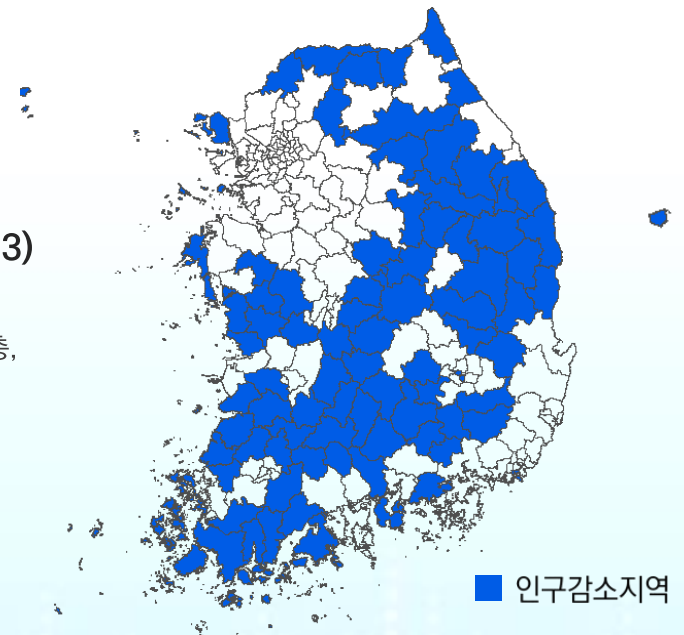
-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 지역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기업유치·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확충, 청년 창업 및 정착지원 등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과 지역역량 강화, 자치단체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균특법 제16조의3과 시행령 제15조의11)

- 인구감소지역에 사회자본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 재정분권2단계_지방소멸대응기금(년1조원, 2022~2031), 광역지원계정 25%, 기초지원계정 75%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 수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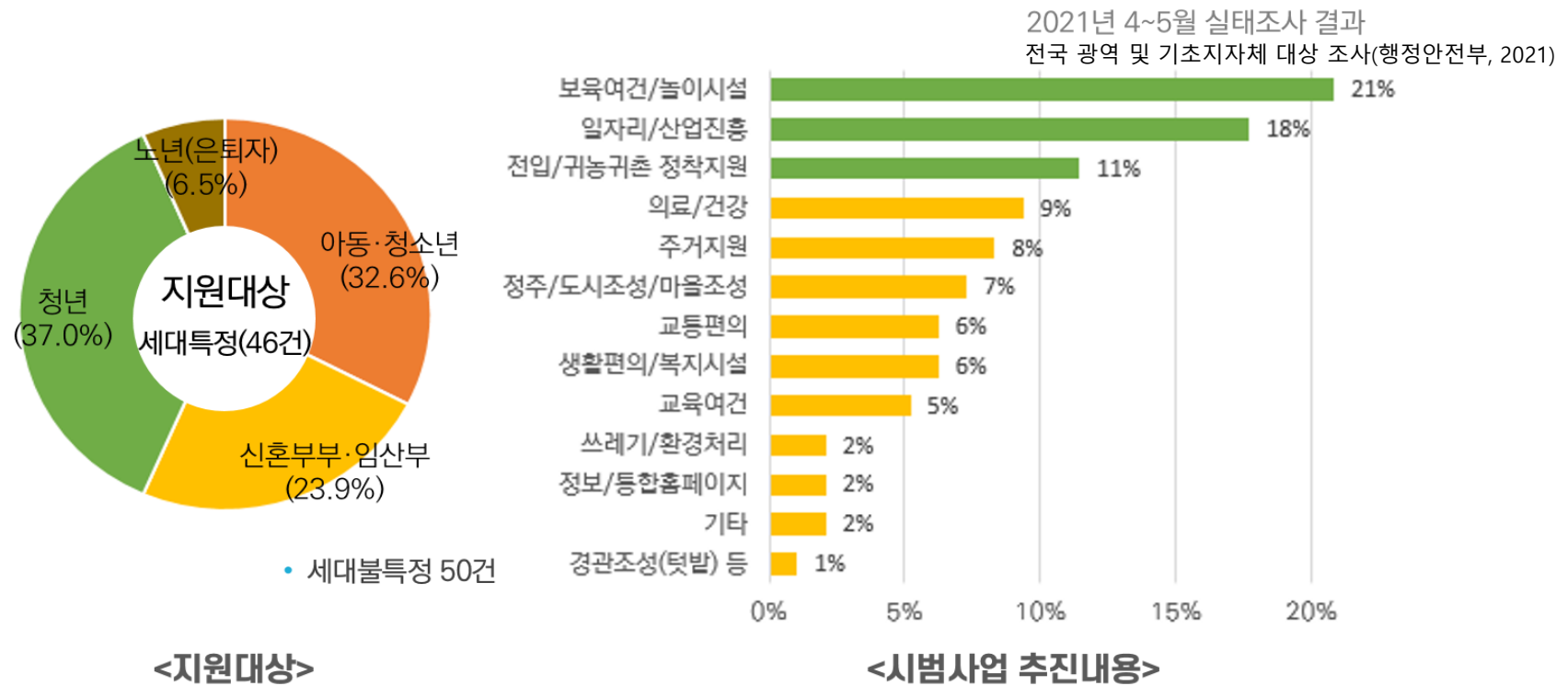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1)

3.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 현황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따라 청년 대상, 저출산 및 일자리 창출사업



3.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 현황

보육·교육 및 놀이시설

- 우리아이 건강 도시락(경남 거제)
-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경남 고성)
-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놀이터 조성(경북 영주)
-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전남 곡성, 경남 함양 등)



의료·건강 및 생활편의 시설

- 건강새마을 조성사업(경북 청도외 32개 마을)
- 맥가이버 선정 지원(전남 순천)
- 산모·아이 돌봄 100일 대작전(경북 김천)
- 의료환경 개선 보건의료원 업무대행 의사 채용(경북)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소멸 위기 돌파 주민들 마을방송 덕택 무전장치로 듣는다



일자리 및 산업진흥

- 고흥형 가업승계 청년 지원(전남 고흥)
- 청년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경북 칠곡)
- 이웃사촌시범마을_스마트팜 창농 지원(경북 의성)
-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육성(경남 창녕)



3.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사업 추진 현황

전입 및 귀농귀촌 정착지원

- 전입자 주소이전 지원금(경북 포항 등)
-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사업(경북)
- 귀농인 정착 장려금 지원(경북 청도 등)
- 고령은퇴도시민 영농 및 생활 지원(전북 무주)

문경시,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공모사업' 선정

경북문경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시립비해지역-음식재활농장 체험 공간 조성



청도군,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교육 및 간담회

경북청도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무주군, 찾아가는 귀농·귀촌 정책.서울시민 상대 정책설명회

무주군청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포항시, '전입자에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 지급'



포항시, '전입자에 주소이전지원금 30만원 지급'

포항시청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정주기반 및 마을조성

-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경북 의성)
- 행복 보금자리 조성(충북 괴산)
- 빈집 리모델링 지원(경남 함양)
- 농촌형 팜프라 조성사업(경북 군위)

편입자 사표 쓰고 차린 만두가게의 '특별한' 원칙

경북의성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함양군, 귀농귀촌인 유치... 빈집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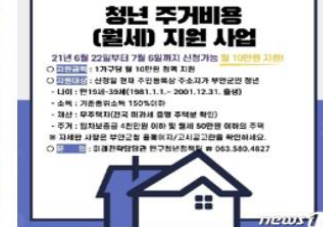


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본격화

충북괴산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청년 주거비율 (월세) 지원 사업



교통편의 및 정보시스템

- 버스공영제 추진(강원 정선)
- 농촌형 교통모델(천원택시) 국비 지원(경북 청송)
- 임산부 아기사랑택시 운영(경북 영천)
- 인구정책 원클릭 통합홈페이지(경북 구미)

원주군, 전국 첫 '공영제 마을버스 도입' 대중교통 혁신 주도

강원원주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임산부 영아가정 위해 '광진맘택시' 달린다

경북영천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부르면 달려갑니다' 달성행복택시 운행개시

경북달성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고령노인·임산부·영유아가정은 택시 '완전 공짜'...이 지역 어디?

경북고령지사 | 2023.04.13 | 1644 | 0 | 댓글 0



3.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 심층조사 & 과제

청년 위주, 지역탐색단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치중

교육, 의료와 건강, 일자리, 체류, 정주기반 및 복지지원사업 등 22개 사례 조사 (2021년 4월~9월)



지역발전 마스터플랜 없이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

- 일자리 창출.지속을 위해서는 일자리-주거-의료-교육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충족 필요

지역 탐색단계 이후 이주·정착 등 단계적 지원과 생애주기 고려 대책 미흡

- 대부분 지원시책들은 청년층 및 한달살기 등에 집중, 지역이주·정착단계와 생애주기 대책 필요

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커뮤니티 진입 촉진 지원과 갈등관리 대비 필요

-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에서 지역주민, 지역청년들과의 갈등 발생으로 정착 애로 경험, U턴 발생

Place-bound tradition에서 time-bound tradition으로 전환되는 사회 대비

- 평생 한 곳에서 사는 사회 → 인생주기별, 삶의 추구 목적에 따라 '삶의 공간' 변화시키는 사회로 전환 대비
- 유연거주 및 복수주소재 도입,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확대 위한 제도개선 필요

자료: 차미숙외(202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

1. 지방소멸 대응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출산율 접근 벗어나, 인구 감소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

인구감소 시대 활력있는 지역 만들기

- 출산율 등 인구의 양적 증대에 한정하지 않고, 인구감소에도 활력있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은 매력적인 지역만들기로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 제시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

지역 주도의 분권형 지방소멸 대응

- 중앙정부 주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의 낮은 성과와 효과 저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짐에 따라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이 주도하는 종합대책** 마련

Policy Mix

People-oriented approach

(인구사회정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목적)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
- (시책) 임신출산지원, 육아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



Place-oriented approach

(지역발전정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정책
- (목적)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 (시책)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혁신도시 등

지방소멸 위기 초래 및 가속화 요인



2. 지방소멸 대응 정책 목표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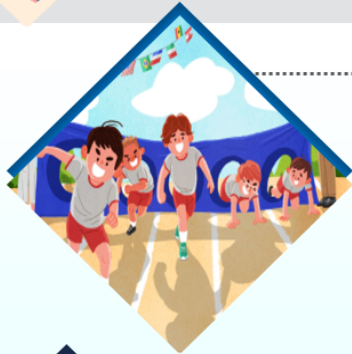
전략 1

전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



보육여건 개선

- 출산장려 국가책임제 등 지자체 간 지원 경쟁 지양과 국가-지방 역할 재정립
-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운영으로 아동보육 환경 개선
- 유휴 공공시설 활용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원



교육기반 확충과 지역인재 양성

-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와 도-농 교류·체험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 학교의 특성화 교육 운영경비 지원
- 지역대학-지자체-지역기업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수도권 소재 대학의 지방이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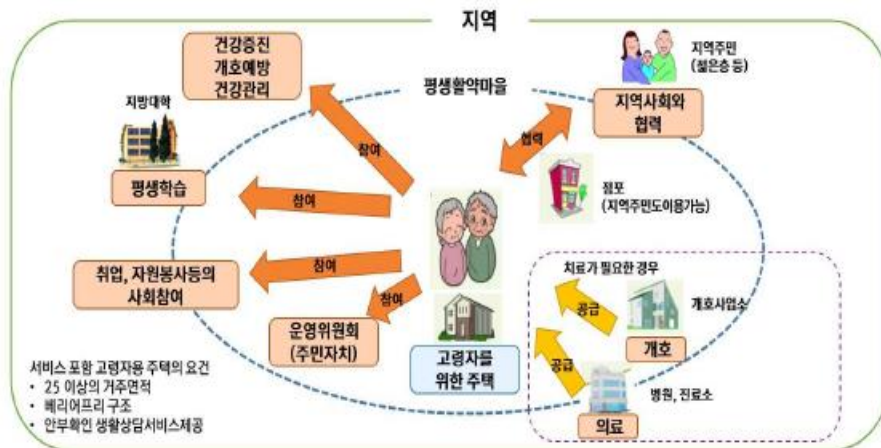


의료·건강인프라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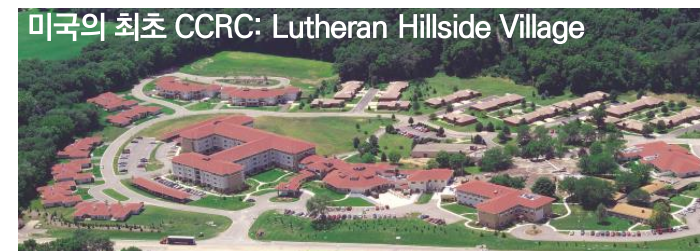
- 재택 진료 및 방문진료사업 확대, 마을주치의 제도화
- 지역 맞춤형 건강마을(CCRC) 만들기 지원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마을 조성

-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도 고령화 및 지역인구감소 대응 목적으로 운영 중
-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 대도시 고령자가 지방 중소도시로 이주,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교류활동+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 (일본) 「평생활약마을」 사업을 통해 고령인의 버킷리스트 실현 지원, 과소화 지역의 인구 유입 유도 등을 통해 지역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지방창생전략 일환)
- 대학연계은퇴자마을 (UBRC)
 - (미국) 대학캠퍼스 내에 고령인구 전용주거시설 설치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고령인구 돌봄서비스 개념을 '시설'에서 '주거'로 전환
 - 대학에서는 평생교육 수요층 확보할 수 있는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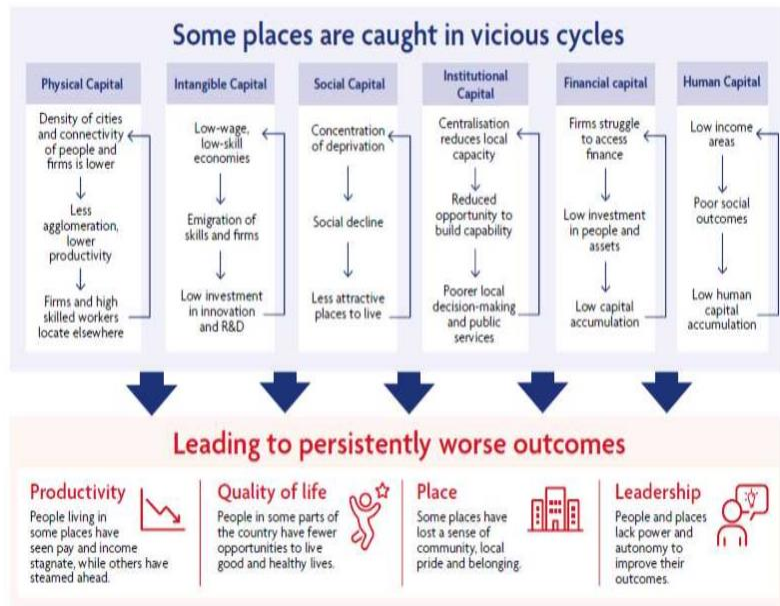


<일본의 평생활약마을 개념도>



영국의 지역격차 해소와 레벨링업(Levelling Up)

지역 격차와 악순환 프로세스



자료: HM Government(2022.2)

1

지역의 생산성, 임금, 일자리와 생활수준 향상

- 생활수준(고용·임금·생산성), 연구개발(R&D), 교통 인프라(접근성·환승·단순 요금체계 등 서비스 향상), 디지털 연계성

2

기회 증진 및 공공서비스 제공 향상

- 교육(초등교육), 숙련(고등교육), 건강(기대건강수명), 웰빙 수준 향상

3

커뮤니티의식 회복, 지역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

- 지역 자긍심(생활만족도, 지역문화·커뮤니티 참여), 주택(안정적 주택 구입 지원), 범죄율 축소

4

지역 주도 및 커뮤니티 역량과 권한 강화

- 지역 주도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추진, 자금운영 단순화, 지방이양 확대

전략 2

개성있는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



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인구 확충

-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유연거주의 촉진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제도 마련
- 생활인구의 확충, 체류외국인·결혼이민자 및 재외동포 지역 정착 지원

* 생활인구란 지역내 일정기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인구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인구 등을 지칭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지원

- 주거 지원, 빈집 리모델링 및 중개, 세컨드하우스에 대한 1세대2가구 세금 감면
- 디지털 기반의 생활편의 서비스 통합 공급 가능한 '스마트 마을' 조성
-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지원, 공유기반 이동성 증진 지원, IoT 기반의 행정서비스



매력공간 창출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스마트축소(smart decline), 매력공간 창출 및 유희시설의 문화적 재생 우대
- 노후·유희시설 등 지역공공자산관리(asset management)와 창의적 활용
- 거주자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순회 문화공연 전시비용 지원 확대

일본의 정책인구 활용 : 정주민, 체류인, 관계인

- **관계인구의 개념** : 이주나 관광이 아닌 지역(일상생활권 및 통근권 이외 특정 지역)과 계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고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인구

- 2021년 일본의 **관계인구 수는 1,827만명으로 추정**(전체인구의 15%) (3대 대도시권 거주자 중 18%, 기타지역 16%)

● 관계인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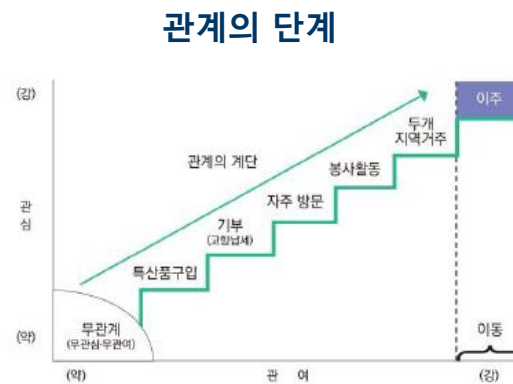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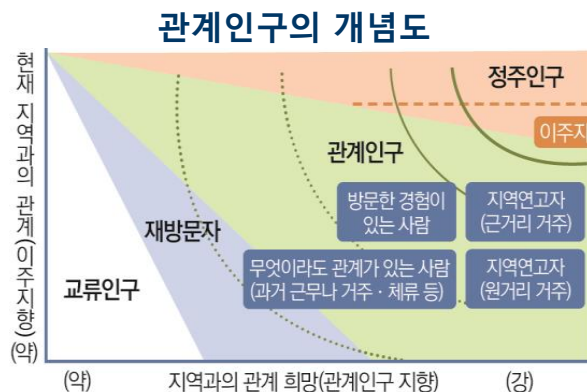
(방문형) 일상생활권 및 통근권, 업무상 지사, 영업소 방문 이외에 정기적·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방문하는 사람

- 지역과 결속 정도에 따라 ①직접 기여형 ②취로형(현지근무) ③취로형(원격근무) ④참가·교류형 ⑤취미·소비형 등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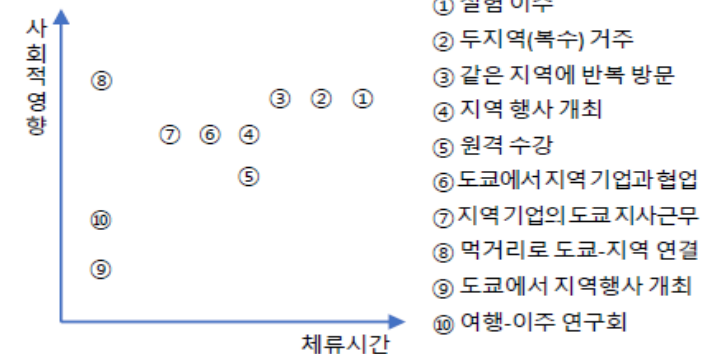
(비방문형) 고향납세, 고향 특산물 구입, 온라인을 활용하여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

● 관계인구 확대 정책(2017년~)

아이들의 농산어촌 체험 충실, 고등학생의 지역유학 추진, 산업인재의 환류 촉진, 지방거주(주거)의 본격 추진, 관계인구 실태조사 및 중간지원조직, 정보 제공



관계인구 유형과 지역사회 영향 (시마네현 사례)



프랑스의 2지역거주 사례

2지역 거주 촉진으로 인구희박지역의 체류인구 증대와 매력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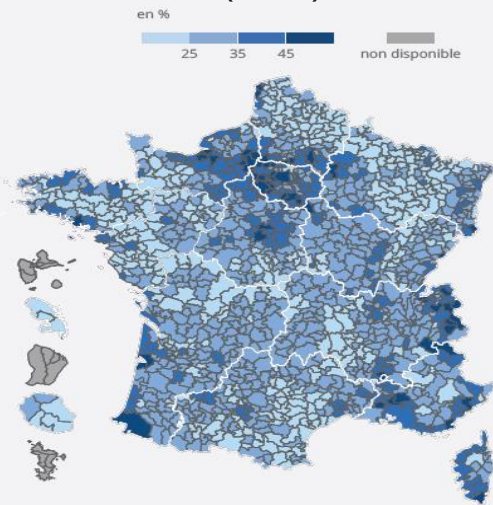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제3의 장소(Tiers-Lieux) 및 산업지역(Territoires d'Industrie) 확대 추진

[가구특성: 소득]

EPCI별 '생활수준(소득기준) 9분위 이상 가구'의 이차거주지 점유 비율(%)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고 이차거주지를 점유하는 가구의 34%가 '생활수준 9분위 이상 가구'에 해당된다.

'생활수준 9분위 이상 가구'에 의해 점유된 이차거주지는 연안지역과 일부 대도시(예: 파리)에 주로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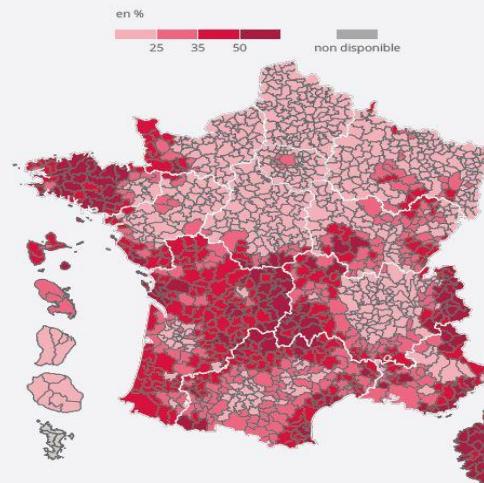


[입지특성: 주(主) 거주지와 거리]

EPCI별 주(主) 거주지와 거리가 차로 3시간 이상 떨어진 이차거주지 비율(%)

34만 8천여 가구가 주(主) 거주지를 그랑 파리 메트로폴에 두고 있다. 그 외 리옹, 뉘르즈, 보르도, 낭뜨, 릴, 니스 등에 거주한다.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고 이차거주지를 점유하는 가구의 38%가 차로 3시간 이내에 주(主) 거주지를 두고 있다.



[비율]

프랑스 주택의 10분의 1은 조세적인 의미에서 이차거주지에 해당한다

[입지]

이차거주지는 연안지역(40%), 고지(16%),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코뮌연합등에 주로 위치한다.

[개별주택면적]

주(主) 거주지보다는 종종 이차거주지의 면적이 적다. (4분의 1이 40m² 미만)

10분 1은 국외에 주(主) 거주지를 두고 있다.

[가구특성]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고 이차거주지를 점유하는 가구의 3분의 2가 60세 이상 가구이고, 이들 중에서 4분의 3이 연안지역에 거주한다.

자료: INSEE 2021.

전략 3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의 생산성 제고

- 농림축산어업 등 지역향토산업의 브랜드화와 부가가치 창출
- 농림축산어업 등 스마트화와 창업 활성화 지원
- 영농승계 및 비영농 서비스 기업 승계 촉진으로 지역기반 소득·일자리 창출 확대
- 지역특산물 판매 촉진과 구독 장려, 온·오프라인 상품권 할인 지원
-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 및 지역활력 증진사업 발굴·지원



기업유치 촉진과 공공기관 이전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시 획기적인 세금 감면
- 기업체 본사 및 사무소 설치 운영 시 세금, 보험료 등 비용 지원
- 공공기관의 지방소멸 위기지역 이전 우선 및 우대 조치
- 지역 특화형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상한 연장
- 유희시설 리모델링으로 재택근무자 위성오피스·코워킹, 생활·문화공간 활용

일본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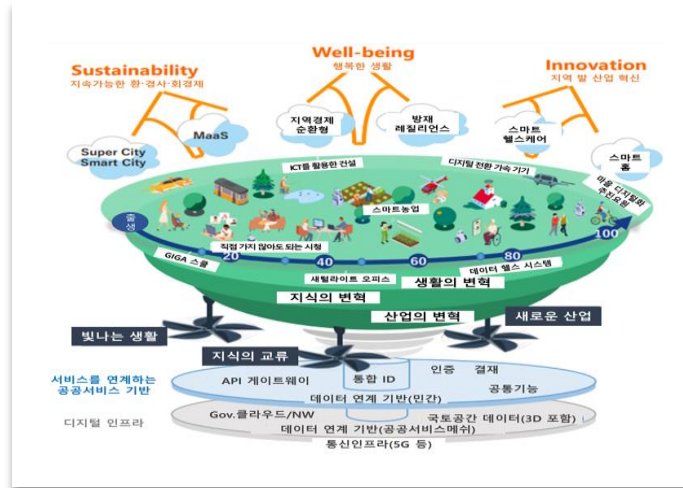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종합전략(2020)에 지방창생 텔레워크, 지역의 디지털화 추진을 추가
- 2021년 11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은 코로나19 이후의 지방성장전략으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발표

"지역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공동화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지털의 힘을 활용하고자 한다... 디지털에 의한 지역 활성화 추진을 통하여 지방에서 국가 전체로의 상향식 성장을 실현해 나간다.."

< 생활의 변혁 >



< 도시공간의 변혁 >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미래상

< 산업의 변혁 >



< 대학의 변혁 >



지역 중심·특색 있는 연구대학의 지역사회에서의 활약 촉진 × 전국적으로 개방된 디지털 연구 기반 = 전국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변혁을 통하여 산업의 변혁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전국 각지에 디지털전원도시 실현(분산형 성장모델)

전략 4

지역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 확대

- 도시-지방 간 사람·정보·자원 교류 확대 지원
- 수도권 개발이익의 지방 교차보조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
- 수도권 거주자 이주시, 수도권 주택대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할증 지급



지역간 연계·협력과 생활권 공유 촉진

- 생활권 단위 시설·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시 인센티브 및 운영 경비 지원
- 생활권 단위 관광루트 공동 개발·마케팅 추진 지원과 지역내 소비촉진 지원
- 유연한 생활권 설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구성과 운영·지원 확대



주민참여형 지역관리 활성화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경제 생태계 조성 및 중간지원조직 활용
- 주민 참여 높은 마을공동체 회사 및 지역관리기업 운영에 금융·재정 우대

도-농교류 사례 : 서울특별시 지역상생 발전전략(2019~20

-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 서울-지방 간 상생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 3대 분야 9개 추진과제 39개 사업 (1조604억원 투자계획)
- * 2021년 지원예산 약 730억원

서울청년, 지역과 함께 창업하다
NEXT 3기 LOCAL



<지역상생 발전전략>

(사람) 서울-지방 상호 인적교류

- 1-1. 서울시민 지역 활동 지원
 - 1-2. 지역주민 서울 활동 지원
 - 1-3. 상호교류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NEXT LOCAL: 지역연계 일자리 창출사업(고용, 창업)
 - 청정지역 프로젝트: 서울청년 지역으로 가다
 - 서울농장 조성 운영, 청년농부 서울을 누비다
 - 농촌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지원, 농촌체험 교실 등

(정보) 혁신기술 및 제도 공유

- 2-1. 서울-지방간 정책 교류를 위한 혁신로드 운영
 - 2-2. 지역수요 맞춤형 우호교류협약 체결 추진
 - 2-3. 지역상생 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 자치단체간 MOU 체결 활성화, 마을과 마을 상생공동체 지원
 - MICE 공동마케팅, K-트래블버스 운영, 지역상생홍보관 운영 등

(물자) 지역지원 연계

- 3-1.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직거래장터 활성화
 - 3-2. 자원연계 복합거점 공간 운영
 - 3-3. 지역상생 농산물 판로 시스템 구축
- 「농부의 시장」 운영
 - 상생상회 활성화, 지역-전통시장 상호협력 공동 마케팅
 - 자연체험 캠핑장 조성, 공공기숙사 게스트하우스 개방
 -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지역 주도의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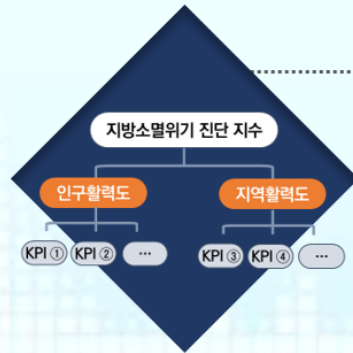
지역 주도의 분권형 계획 수립과 지원시책 자율 선택

- 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중앙정부 통합지원체계 운영(컨설팅 지원 등)
- 지역 여건과 수요에 따라 지원시책과 특례사항을 자율 선택·운영



포괄보조 확대와 중앙-지방 협력협약 체결

- 다부처 협업사업 확대 지원, 부처 개별 공모사업 추진방식 가급적 지양
- 계획 기반의 포괄보조 예산편성·집행, 중앙-지방 협력협약 체결 운영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 자원 조달 강구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확산

- 지방 인구변화 및 계획 모니터링으로 실증기반 정책(EBPM) 기반 마련
- 인구, 소비, 일자리 등 성과지표(KPI) 발굴과 인구 및 지역활력도 측정·관리
- 지방소멸 위기대응 우수사례 확산과 시범사업 성공모델 구축·확산
 - 중앙-지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정보 공유

3. 인구감소시대 걸맞는 규제와 제도 개선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사회 공감대와 연대 의식 강화

인구감소시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새로운 기준과 제도 마련 필요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운영

▶ 도서지역 경로당 이용인원 기준 변경

▶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 후계 농업경영인 대상자 연령기준 완화

▶ 귀농인 지원 자격기준 완화

▶ 인구감소지역 전통주 주세 감면

▶ 생활인구 등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외국인유학생 등 체류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

▶ 세컨드하우스 취득세 등 세금 감면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자격 개선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기준 개선(통작거리 범위)

▶ 원격의료 허용범위 완화 등 ...

감사합니다
mscha@krihs.re.kr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토론회

인구감소 대응 대책 추진방안

2022. 4.



Contents



I 지역 인구감소 현황

II 그간 정책의 한계

III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IV 주요 추진방안



지역 인구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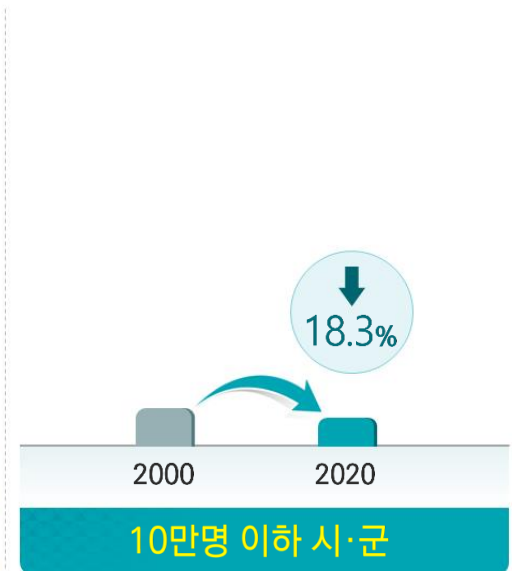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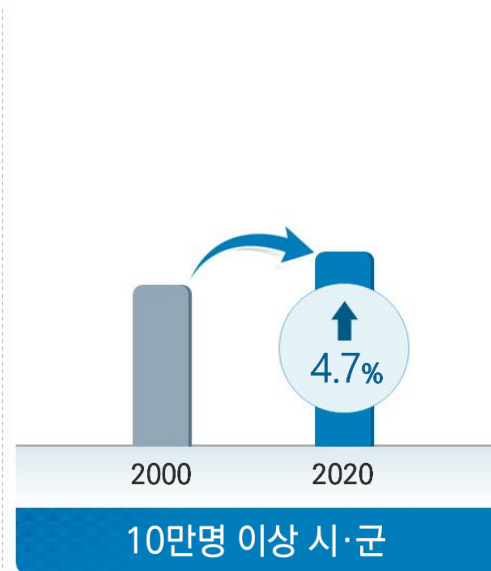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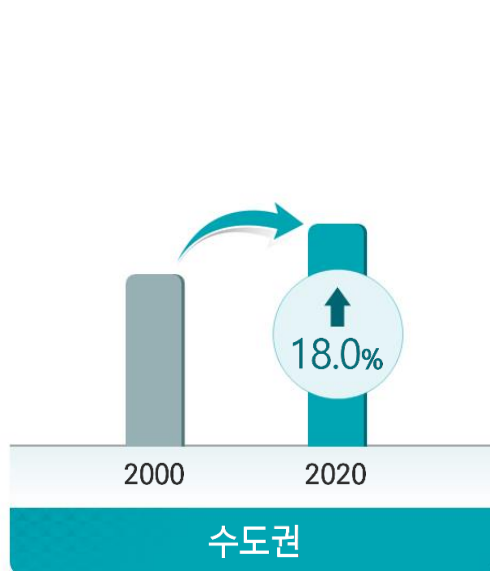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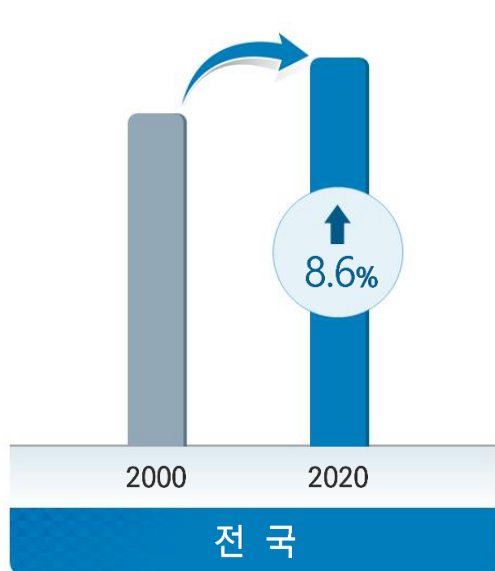
I 지역 인구감소 현황



지역 인구감소의 심화

지난 20년간
소규모 지역의 인구감소가 뚜렷
(통계청)

- ☑ 전국 시·군·구의 66%(151개)에서 인구 감소
- ☑ 인구정점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 시·군·구는 전국의 27% (60개)
- ☑ 수도권 인구가 18% 증가,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 감소



I 지역 인구감소 현황



사회적 인구증감의 영향

국가 총 인구 감소는 자연적 증감인 반면
지역별 인구 증감은 사회적 증감에
더 큰 영향 받음



지역의 청년층 유출, 중장년층 유입 현상 지속

청년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중장년층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지역경제의 격차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인구의 50% 초과

수도권 (2019년 기준)

- ☑ 전국 GRDP의 52%
- ☑ 카드 사용액의 72%
- ☑ 1,000대기업 본사의 75%
- ☑ 전국 대비 가구소득의 54.6%
- ☑ 지역총소득의 55.6%
- ☑ 종합소득세의 67.9%





지역 인구감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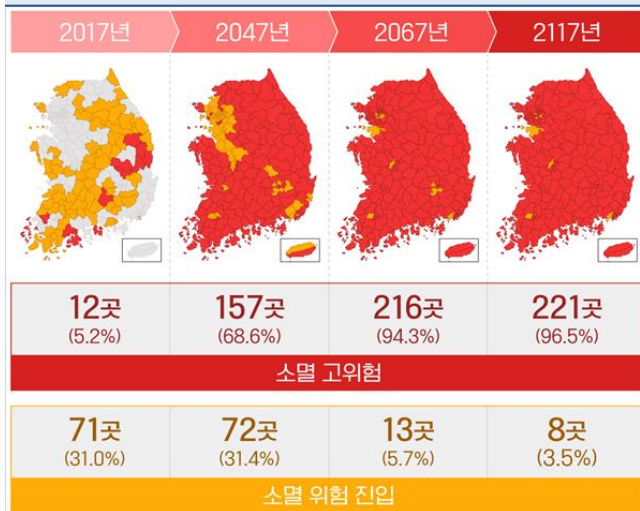
향후 인구구조 전망

인구감소
위험의
현실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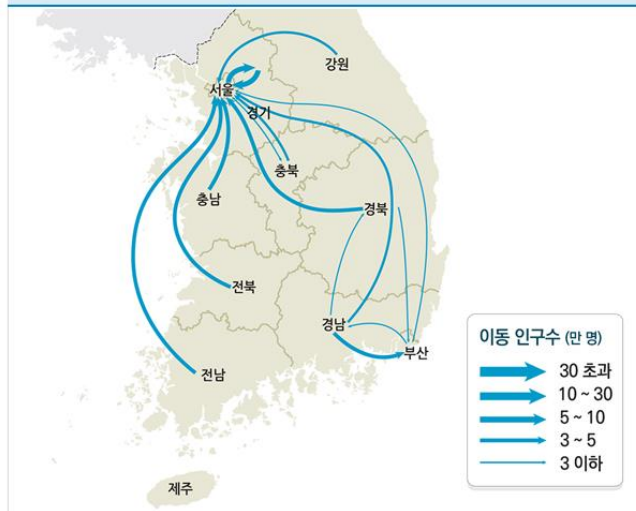
인구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2040년
지역의 고령화율
40% 초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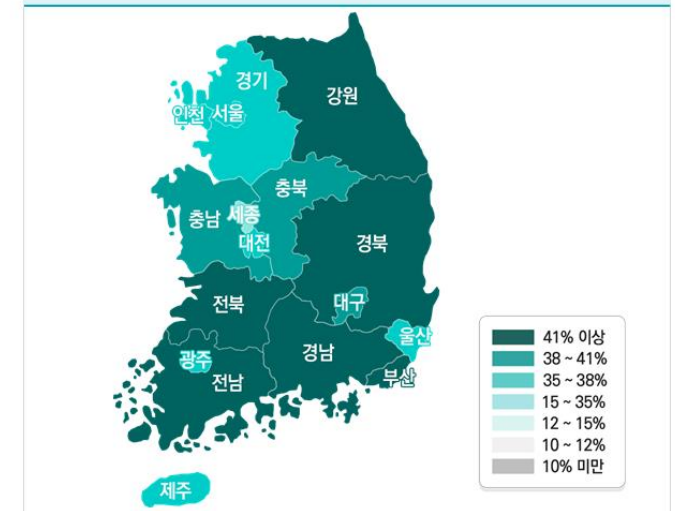
시·군·구별 장래 소멸위험지역 분석



우리나라 안에서의 인구 이동 (2020)



시·도별 고령인구 구성비 (2047)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인구수 /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 0.2 미만-소멸고위험지역<0.2-0.5 미만-소멸위험진입 단계<0.5-1.0 미만-주의단계<1.0-1.5 미만-소멸위험 보통<1.5 이상-소멸위험 매우 낮음



그간 정책의 한계



Ⅱ 그간 정책의 한계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

- ✓ 중앙의 필요에 따른 Top-Down식 국고보조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특수성이 미반영된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사업 추진
- ➔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목표 틀에서 지역의 자율성 있는 사업 추진 한계



각 중앙부처 사업간 단절

- ✓ 지역의 인구감소는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별 기준이 상이하고 분산적으로 추진
- ➔ 지역 단위로 구분된 지원체계로 지방의 종합적 대응을 위한 연계 부족



대책 강화

인구감소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Ⅲ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정 책 목 표

인구활력도 증가

※ 주민등록상 정주 인구 이외에 당해지역과 교류·왕래·체류하는 생활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활력 증진 목표

기 본 방 향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각 부처 보조사업의
연계·협력을 통한 지원

지역 상황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지원

세부 추진방안

전략1

제도적 추진체계 구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전략2

지역 주도성 강화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활용
- 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

전략3

지역 협력 활성화

지역간, 지역-중앙간 투자협약 등을 통한 협력 강화

전략4

지역 활력 증진 맞춤형 지원체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및 확보



Ⅲ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시책지원

개정 完

- 균특법 개정('21.6월 시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21년 하반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3~'27년)에 지원대책 반영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 : '22~'31년, 연1조원 지원

개정 完

-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도입,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지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세부적 특례 지원

제정추진중

- 지방소멸 대응 방향 및 세부적인 특례 사항을 규정한 별도 특별법 마련
- 지역주도성 강화, 지역간 연계·협력, 지역활력 증진, 제도특례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주요 추진방안



IV 주요 추진방안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인구감소지수 산정

인구감소지수 산정 흐름

지표선정 및 표준화

최종지표(8개) 개별값을 변환해
표준화 (0~1값)

가중치 산정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지표별
가중치 산출

지수화

가중치를 반영해 지표값 합산

최종지표

1

연평균
인구증감률

20년, 5년

2

인구밀도

5년 평균

3

청년순이동률

5년 평균

4

주간인구

2020년

5

고령화 비율

5년 평균

6

유소년 비율

5년 평균

7

조출생률

5년 평균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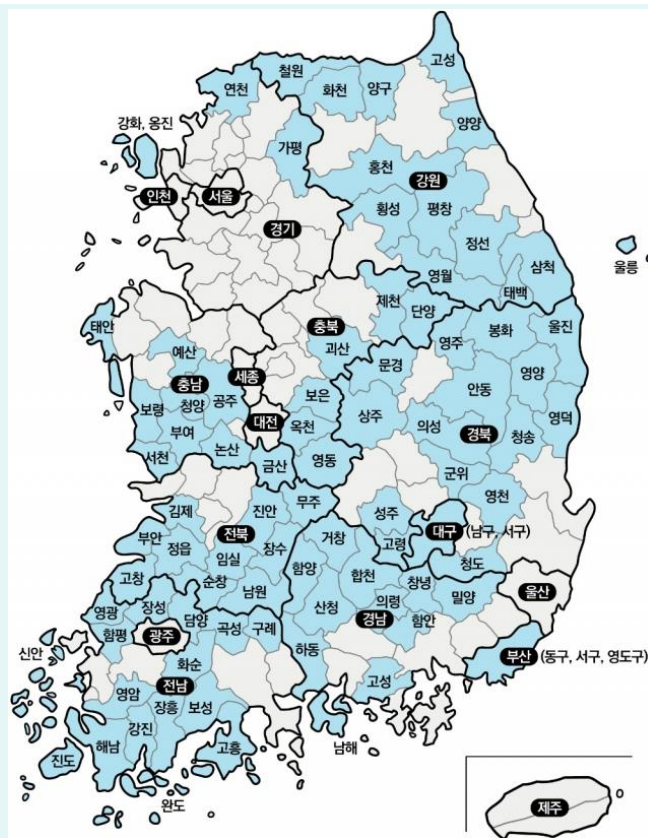
재정자립도

5년 평균

IV 주요 추진방안

1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인구감소지역 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IV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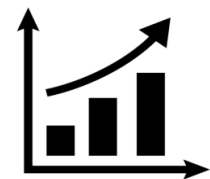


✓ 기금 도입 배경 :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목적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22~'31)
- 연 1조원(기초 75%, 광역 25%),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지원('22년은 7,500억원)
- 지자체 **자주재원**이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

✓ 기금 운영 기본방향 : 목적성, 자율성, 성과 지향

-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
-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추진
-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사업 우수성에 따라 차등 배분**



IV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차등배분, 광역지원계정은 정액배분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 ✓ 89개 지역
- ✓ 기초계정의 95% 배분
- ✓ 최대한도 '22년 120억, '23년 160억

관심지역

- ✓ 18개 지역
- ✓ 기초계정의 5% 배분
- ✓ 최대한도 '22년 30억, '23년 40억



광역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

- ✓ 11개 지역
- ✓ 광역계정의 90% 배분
- ✓ 배분금액 '22년 378억(전남)~4억(경기)
'23년 505억(전남)~5억(경기)

그 외 시도

- ✓ 4개 지역
- ✓ 광역계정의 10% 배분
- ✓ 배분금액 '22년 14억(광주, 제주)~9억(대전, 울산)
'23년 18.75억(광주, 제주)~12.5억(대전, 울산)

* 서울, 세종 배분액 없음

절차

투자계획안 수립·제출(기초) → 투자계획 평가(평가단) →
지자체 협의·자문(심의위원회) → 투자계획 수정·제출(기초) →
조합회의의결로 최종 결정(조합)

절차

투자계획 수립·제출(광역) → 지자체 협의·자문(심의위원회) →
투자계획 수정·제출(광역) → 조합회의의결로 최종 결정(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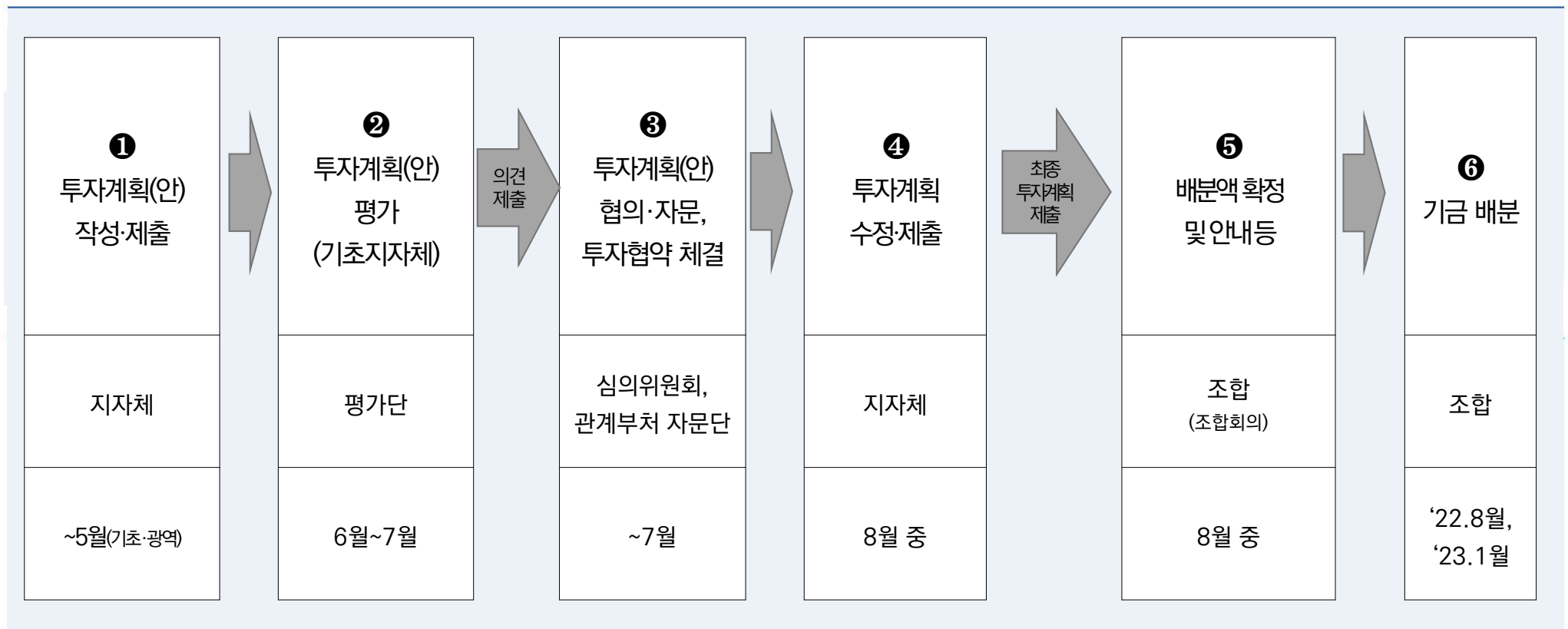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 배분절차('22년도)



IV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 투자계획 현황

투자계획 개념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재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계획

- ✓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목표 수립
- ✓ 기금사업, 연계·협력 및 추진체계 등을 설계
- ✓ 기금사업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효과성 제고

➤ 기초지자체 배분금액은 평가단이 기금사업의 우수성
등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정함**

투자계획 수립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광역)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등
- ✓ (기초) 지역에 맞는 전략 및 목표 수립 이를 기금사업으로 구체화

투자계획 범위

- ✓ (시간적) **중·장기적** 목표·전략 수립, **연차별 추진계획** 명확히 제시
- ✓ (공간적) **광역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 집중지원**, **기초지자체**는
타 사업과 연계·집적화 할 수 있는 **거점 중심** 추진
- ✓ (내용적)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부합, 종료 후 **지속적으로 효과** 발생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 투자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지자체 협조사항)

지속적인 성과창출

- ✓ 지역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발굴·추진
- ➡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효과·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타 사업 연계

- ✓ 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국고보조사업, 지자체사업, 민간자본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되도록 계획 수립
- ➡ 지자체 내 기금 사업간 연계하고, 지자체 간의 사업·정책을 연계하여 추진

추진체계

- ✓ 다양한 조직이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
- ➡ 단체장 중심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효과·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 투자 대상사업 및 제외 대상

- ✓ (투자방향)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기금 활용
 - 지역 인구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HW+SW) 조성
 - 한정된 재원인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내 거점을 중심으로 사업 연계 및 집적화
- ✓ (대상사업)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일상과 직접 관련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 (하드웨어) 정주·생활인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 (소프트웨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인구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 ✓ (기금 투자 제외대상) ※ 평가 시 반영
 -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재원(지방비 부담액)
 - 인건비, 경상비 등 소모성 경비, 현금성 지원 등
 - 지역 내 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

IV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 지원 외 범정부 협업사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시·군·구

- ✓ 지역의 자체사업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계정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시·도

- ✓ 인구감소지역 지원
- ✓ 광역단위 프로젝트는 광역계정을 활용



용도

지역이 수립한 투자계획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적합한 사업에 활용

범정부 협업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우대 지원

중앙정부

- ✓ 12개 부처 53개(2.6조원)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점부여, 공모기준 완화, 사업 일정량 할당(또는 우선배정)으로 실질적 혜택 지원
- ✓ 지자체 수요를 바탕으로 확대 발굴 예정

분야

일자리·경제

공동체
활력제고

기반조성
등

입주·정착

정주여건



주요 추진방안

2 지방소멸대응기금



기금 투자계획 평가방향

- ✓ (평가기간) '22년 6 ~7월
- ✓ (평가대상) 107개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 관심지역 18개)
- ✓ (평가단 구성) 균형발전, 인구감소 대응 관련 전문가로 구성
- ✓ (방법 및 기준) 1차 서면평가 및 2차 대면평가 추진
- ✓ (평가항목) 사업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IV 주요 추진방안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특별법안 주요 내용

- ✓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시·군·구 → 시·도 → 국가)
- ✓ (추진체계) 시·도 및 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위원회 설치**
- ✓ (협약) 국가 및 지자체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 체결**
- ✓ (생활권 연계·협력) 지자체 간 **생활권 설정**, 시설 및 공동서비스 **공동이용 등 연계협력 방안 마련**
- ✓ (생활인구)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
- ✓ (특례) 청년 일자리 지원, 중장년 정착 지원, 보육여건 개선, 교육·의료·주거·문화기반 확충, 외국인 체류 특례 등





주요 추진방안



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특별법안 내 인구감소지역 특례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어린이집에 행·재정적 지원 등

교육

유·초·중·고 통합운영
지방교육교부금 지원
초·중·고 설립 인가 특례 등

의료

방문진료사업 지원
필수의료기관 비용 지원
거점의료기관 우선지원 등

주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공유지 우선 매각 허용
교통서비스 지원 등

문화

작은도서관 설치
학예사 운영 특례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 등

외국인

비자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상향 특례

유희시설

유희시설 활용범위 확대

IV 주요 추진방안

4 지역 주도성 강화

■ 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

- ✓ 인구감소지역 주도의 **인구활력계획** 수립
- ✓ 인구활력계획을 국가 **인구감소 위기대응 종합계획**에 반영
- ✓ 종합계획을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연계·반영



시·군·구 인구활력계획

(예시)

시·군·구 자체사업

생활인구
증진형

공유공간
구축형

청·장년층
유입형 등



시·도 지원사업

생활권 교통,
복지시설 연계 등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도시재생
(국토부)

어촌뉴딜
(해수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행안부)

IV 주요 추진방안

5 지역 협력 활성화

■ 투자협약 등을 통한 지역간, 지역-중앙간 협력강화

지역간 연계·협력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하여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 **상호 협력을 강화** 지원



중앙-지역간 연계·협력

국가-지역간 **투자협약**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의 **정책 실행력 제고**



IV 주요 추진방안

6 지역활력 증진 맞춤형 지원체계

지역주도 인구활력계획 수립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 ✓ 특별법(안) 상 생활인구 정의 및 관련 시책 근거 등을 반영하여 생활인구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시책

- ✓ 연령대별 주기적 교류·방문의 주요 목적을 고려하여 맞춤형 시책 추진



창업, 영농 등 일자리 확보 등

일시 거주공간 제공,
농업교육 지원, 농촌체험하기 등을
통해 지역 적응력 강화

청년

연령대별
맞춤형
시책 예시

중장년

은퇴 후 휴식, 주말농장 등

세컨드하우스 구입을 위한
세제 감면, 쉼어하우스 등 주거지원,
농지규제 완화 등



인구활력 지표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

인구활력 지표 개발

인구활력을 측정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 단계까지 활용하도록 지표 개발



IV 주요 추진방안

7 행정안전부 지원 시책

지자체 투자계획 수립 컨설팅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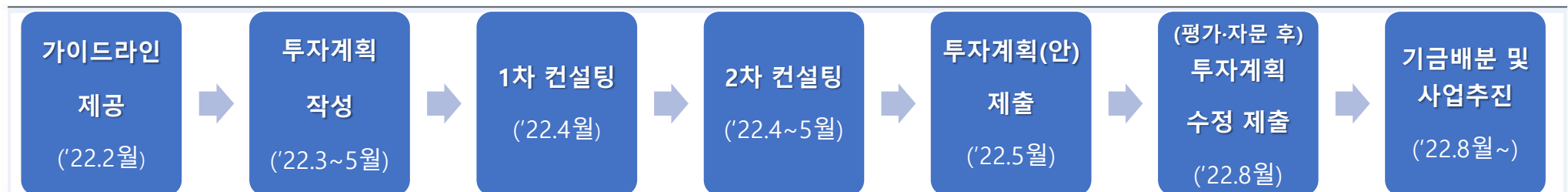


전문가 컨설팅 지원

- ✓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별·분야별 전문가 및 민간기업을 통해 컨설팅 지원

빅데이터 분석 지원

- ✓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발전방향 수립, 사업추진 의사결정 등에
공공빅데이터 및 민간빅데이터 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



지자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우수사례 제공 및 발굴

- ✓ 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활용하도록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제공
- ✓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특교세(10억) 지원 예정(22.下)
- ✓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KBS 6시 내고향 방송협찬 추진중(22.3~4월)



감사합니다

